

5·18 성폭행 국민 분노 들끓는데 계엄군은 '국가유공자' 라니...

2004-2017년 13명 추가 지정 ... 전체 100명 이상 될 듯
시민들 "부상 군인, 보훈대상 이해해도 국가유공자는 안 돼"
보훈처 "전수조사 실시해 배제 검토"... 국회 법률 개정 시급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엄군들이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의 공상(공무상 상해)과 전상(전투상 상해)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198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당시 계엄군들의 신원과 사유를 재확인하는 한편,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배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12일 국가보훈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계엄군 30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의에서 총 1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전상은 9명, 공상은 4명으로 분류됐다. 시기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10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2004년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지정 기록

이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아 국가보훈처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내에 5·18 계엄군 가운데 당시의 부상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지정된 사례를 모두 찾아낼 방침이다. 또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에서 적절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80년 5월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엄군들이 입은 전상과 공상 등이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무력진압을 지시한 군부 세력 및 지휘관들, 일탈 행위를 자행한 일부 계엄군들은 끝까지 색출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상부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없이 임무 수행에 나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군인들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18 당시 부상을 입은 계엄군을 정밀 심사, 보훈대상자로 선정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많았을 것이며, 전체적으로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5·18 진압군 가운데 부적절한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례를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5·18 당시 계엄군을 그 위치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법률상 국가유공자 배제는 국가보안법,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와 형법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국가유공자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한 자 등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공동조사단이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례 17건 가운데 12건이 집단성폭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5·18 당시 여고생 2명을 포함한 여대생, 임산부, 주부 등이 계엄군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능 시험 문제지 도착 15일 치러질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12일 오후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직원들이 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를 옮기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속도 낸다

저심도 방식 건설 재개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난 16년간의 논란을 마치고 본격 건설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찬성 권고안을 수용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저심도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했던 일부 시민단체도 공론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 시장은 12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위원회로부터 최종 권고안을 전달받은 뒤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년간의 길고 긴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일시 중단 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론화 과정이 다른 어느 지역 공론화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도시철도 2호선을 저심도 방

식으로 차질없이 건설할 것임을 150만 시민에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설계와 교통·환경 영향평가, 중앙정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건설 반대 측에서 제기했던 경제성, 안전성, 미래교통 체계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안전·신속·친환경 명품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건설을 재개할 것을 이 시장에게 공식 권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성사 최대한 노력

광주시장·현대차 사장 약속
사업 무산 위기 일단 벗어나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이 12일 만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지역노동계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광주시장과 현대차 사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무산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이 시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진행 현대차 사장과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광주 경제,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 사장과 독대 이후 취임 6개월을 맞은 흥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15일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태호 청와대 비서실 일자리수석 등을 연이어 접촉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충분히 교감을 나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진이 만나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이 서울에서 현대차,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과 접점을 찾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지

역노동계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 부시장은 13일 밤 투자유치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갖고 이날 현대차가 이 시장에게 전달한 내용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등 이점을 보이고 있는 2-3가지 안에 대해 상호 수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13일 밤 논의 결과를 현대차가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1차 관문이 될 전망이다. 시는 내년 예산에 합작법인 투자금액인 590억원을 반영하며, 타결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부시장은 "이 사업의 핵심적인 지역 노동계는 끝까지 안고 가야 할 대상"이라며 "투자유치추진단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예산, 광주시 5조877억·전남도 7조3691억원

광주시가 사상 첫 예산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는 7조원을 돌파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1438억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9439억원 등 총 5조877억원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올해 대비 938억원 (5.3%) 증액된 1조8706억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4548억원 (21.1%) 증

액된 2조611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810억원 (27.6%) 증액된 8357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을 위해 59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육성, 인구청년 대책 등을 적극 반영,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여촌뉴딜300 등 국고보조사업과 소방특별회계 등이 크게 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2% (6183억원) 늘어난 7조3691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6조5571억원과 특별회계 8120억원이다. 특히 신규 시책에 배정된 예산은 국고를 포함해 모두 2000억원으로, 이중 도 자체 예산은 750억원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KRFS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주택
• 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임대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문의 전화 **1577-7770**